

공동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추진하는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

취재 : 이 병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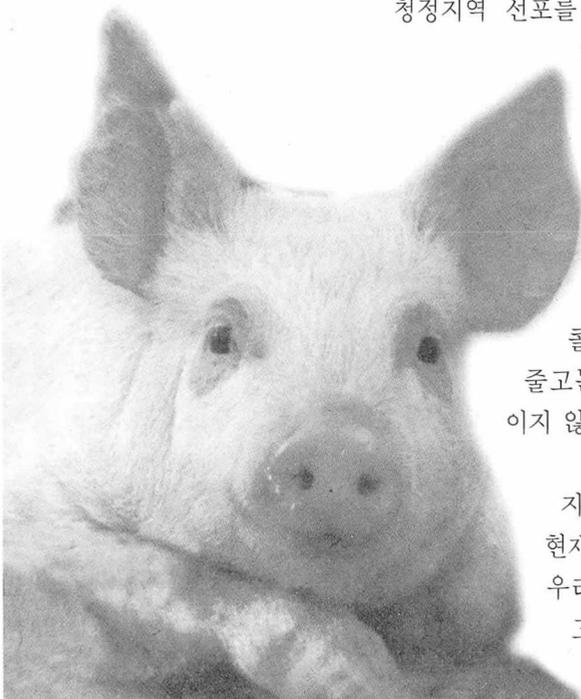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 무국(OIE)이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나라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로 돼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수출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콜레라가 6개월 이상 비발생할 경우 그 나라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포를 승인해 주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콜레라 발생건수가 96년 39건, 97년 20건, 98년 12월 현재 5건 등 콜레라 발생이 줄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현재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물량 누 계 는

80,457톤으로 지난 '97년 동기대 비 누계 43,736톤의 184%를 수출하는 등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일본에 대한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돼지고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돼지콜레라 박멸이다. 전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돼지콜레라가 1980년 이후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지난 1993년부터는 발생보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완수하고 이후 2001년 4월 부터는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즉 일본이 2001년부터 돼지콜레라 청정국가로 선포하고, 돼지콜레라 발



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출용 돼지가 내수용으로 전환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다.

2001년 청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전국 53개 공동방역사업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2001년 청정화를 목표로 지난 '97년부터 돼지콜레라박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국 53개소 공동방역 사업단을 구성,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강화, 도축장·도계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까지 전국적으로 콜레라 백신접종 100% 달성, 2000년에는 백신접종을 금지하고 청정화 유지를 확인한 후 2001년에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맞추어 우리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12월 현재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등 이 사업은 여러군데서 허점을 보이고 있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여진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



한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발생 사건은 우리 정부의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대한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선 공동방역사업단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 방역업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방역차량, 소독기 등 기자재 보조에만 그쳐 전국 53개에 이르는 방역사업단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방역사업단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각 지역마다 정부차원에서 보통 2명씩 지원하는 공수의사의 경우 공수의 자격을 그 지역 개업수의사 뿐만 아니라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들에게도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수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백신접종 기술비

도 시급히 박멸해야 할 콜레라에 집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일본뇌염과 돼지전염성위장염(TGE)에 한해서만 기술비가 보조되는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지원 자금이 공동방역사업단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신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양돈농가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내 양돈산업이 그 기반조차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98년 11월 4일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가 결성된 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진은 경기 동남부 양돈 방역협의회 및 콜레라 박멸자문단회의 모습

이천 · 여주 · 안성 · 용인 등 4개지역이 공동으로 방역사업 펼치기 위해 협의회 결성

돼지콜레라 방역은 양돈농가들이 먼저 인식하고 필요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짧은 시일안에 박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양돈농가가 주체가 되어 박멸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이천, 여주, 안성, 용인 등 경기 동남부 4개지역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이 공동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동남부 양돈방역협의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는 이천공동방역사업단(단장 : 진길부), 여주(단장 : 이광우), 안성(단장 : 윤상익), 용인(단장 : 성낙신) 등 4개지역의 방역사업 단장을 축으로 양돈인, 학계, 지자체 방역관련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돼지 총 60만두, 전국의 8%를 차지하는 이 지역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대일 돈육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결성한 자율양돈방역협의회라 할 수 있다.

지난 '98년 11월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는 업계와 학계의 양돈전문수의사, 교수 등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행상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협의회는 첫 모임 이후에도 4개지역 각 지역별 모임을 계속적으로 갖고 양돈농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이천·여주지역 콜레라백신 취급업소 대표자회의 등도 개최하여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99년 6월 백신접종 100% 달성, 2001년 완전 박멸 선포 계획

방역협의회는 주요 사업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99년 6월 안에 4개지역 콜레라 백신접종 100%를 달성한 후 100% 접종 2회 확인시 99년 10월부터 백신공급을 중지, 2천년 한해 동안 확인한 후 2001년에 완전박멸을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역협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금모금사업, 양돈농가 백신접종 실태조사, 혈청조사 및 차량이동검사 등 3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우선 농장실태조사, 박멸홍보, 각종 모임, 교육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99년 6월까지 1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세우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12월 현재 1천여만원이 모금된 상황이라 한다. 또한 각 지역 농가수를 보면 이천 299개 농가, 안성 240여개 농가, 여주 130여개 농가, 용인 380여개의 농가가 있으며 이중 70~80% 가량의 농가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천의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콜레라 백신접종이 100%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홍보, 농가계도를 해야하는 등 방역협의회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99년 1월과 2월 동안에 수의학을 전공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 1주일 교육 후 각 시군 공동방역사업단에 1명씩 배치하여 지역 공방단과 함께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미접종농가 확인시 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시술하여 주며, 각 농장의 비육돈에 대한 혈청검사와, 출하농장 실명제를 위한 돼지이동차량 검사, 무작위 샘플 확인, 백신 판매업체 확인 등의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

또한 7~8월에는 8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여 백신접종 확인, 야외감염 조사 등을 실시하며, '99년 12월 이후 콜레라가 발생시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한 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천년에 백신접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 돼지 이동증명서를 확인해 가면서 타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을 해나가면 콜레라를 박멸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방역협의회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양돈방역협의회 김준영 수의사는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어려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2천년에 콜레라 백신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실을 감안했을 때 99년에는 생독백신을 접종하고, 2천년에는 사독백신을 접종한 후 그 이후에 대처를 해야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수의사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농장에 이상이 발생시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방역협의회에 먼저 알려 주어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방역협의회,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 요소

한편 민간주도하에 조직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김 수의사는 양돈방역협의회를 이끌어 가려면 상당히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민간부문의 모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첫째로 지역 대동물 위주의 수의사가 대부분인 공수의 제도를 개선하여 양돈공동방역사업단 내의 양돈전문수의사에게도 공수의 자격을 부여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둘째로 공수의를 통해 지원되는 백신접종 시술비의 경우 현재 일본뇌염과 돼지전염성위장염(TGE)에 한해서만 시술비가 보조되고 있는 바 2천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시술비를 보조해 주는 등 공수의 보조비용과 함께 시술비를 운영자금으로 보조받아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방역협의회는 지난 '98년 11월 첫모임을 가진 이후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누구 하나만 잘되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지역 양돈농가들만 살자고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참여해야 하며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함께 추진해야만이 이 사업이 요구하는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지역도 경기 동남부 지역을 표본으로 각 지역별 협의회를 결성하여 시행하는 등 민간주도의 돼지콜레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돈산업을 21세기에 집중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자금투자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콜레라를 내년까지 기필코 박멸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경기 동남부 지역의 민간 주도 양돈방역협의회에 대한 적극 보조 및 타지역에 대한 홍보 등 현실에 맞는 정확한 박멸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적절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하며 기필코 2천년 안에 돼지콜레라가 박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돈**